
PART 4

지역발전



잠자고 있는 땅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다	69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공유재에 대한 권리확보	73
관광안내 '챗봇'이 도와드려요	76
콘텐츠산업의 선두주자를 꿈꾸다	78

〈추진부서〉 경기도 성남시 물순환과(031-729-4182)

잠자고 있는 땅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다 〈전국최초 비행안전 1구역내 환경기초시설 설치 행위제한 완화〉

• 개선배경

〈현황〉 성남 하수처리장은 성남시 전역(판교제외)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29년간 운영함에 따라 시설 노후로 인해 과도한 수선유지비 및 시설개선비 등 막대한 예산 소요
또한, 하수처리장이 설치(1992년)되었을 때의 주변환경(논, 밭 등)과 달리 현재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심지로 변모되어 인근주민 및 주요간선도로 이용자의 악취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

- 성남시는 하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합하는 '성남환경기초시설 통합 현대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는 공공개발을 통해 행복주택, 재개발 순환주택, 창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임
- 그러나, 통합현대화사업 부지는 군사기지법 상 비행안전 제1구역에 속하여 군사시설 및 도로를 제외한 모든 시설의 설치가 제한된 지역으로 현대화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임
- 하수처리시설은 시설 특성상 배수구역 하류에 입지하여야 하나, 비행안전 1구역과 중첩되어 군사기지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

▶ 맑은 물이 흐르는 친환경 개발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건의

• 개선내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개 선 전	개 선 후
- 비행안전 1구역 내에서 군사시설 및 도로를 제외한 모든 시설의 설치가 금지	- 비행안전 1구역 내에서 지하에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 및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 가능

- 군사기지법 개정을 위하여 국회, 군부대,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업한 결과, 지난 3월 군사기지법 개정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 추진과정

- 군부대 협의
 - 2018. 10. : 성남수질복원센터 현대화사업 보고(T/F팀 구성 및 운영)
 - 2018. 10. : 비행안전1구역 저촉에 따른 군부대(15비)협의
 - 비행안전1구역 내 지하구조물 설치에 대하여 심의절차 이행 협의
 - 심의내용 : 작전성 검토 및 비행안전1구역 심의(15비 및 공군본부)
 - 2018. 11. : 비행안전구역내 행위협의 [성남시 → 15비]
 - 2019. 1. : 1구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건의서 제출 [성남시 → 15비]
 - 2019. 2.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저촉, 입지불가 통보 [15비 → 성남시]
 - 2019. 3. : 관련사항 재협의(법률개정에 대한 의견 요청) [시 → 15비]
 - 그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고 기존시설을 포함한 완전지하화계획에 긍정적 검토의견, 군 심의절차 이행과정에서 법률개정 필요 사항 결정
- 규제개혁 간담회 안건 상정
 - 2019. 3. :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계획 알림[경기도 → 성남시]
 - 2019. 3. : 규제개혁 간담회 안건제출[성남시 → 경기도]
 - 2019. 5. :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 비행안전 제1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설명
 - 2019. 7. : 규제개혁 간담회 개선과제 보완요청[경기도 → 성남시]
 - 2019. 7. : 규제개혁 간담회 개선과제 보완제출[성남시 → 경기도]
- 중앙부처 협의
 - 2019. 3. ~ 2020.2. : 사업추진 및 법률개정 관련 간담회 다수 시행(국회의원, 성남시, LH공사)
 - 2019. 7. : 군사기지법 개정안 국회 상정
 - 개정안 국회 상정 후에도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개정 필요성 지속적 설명
 - 2020. 3. : 본회의 통과 및 공포

• 개선효과

- 전국 최초 비행안전 1구역 내 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능(제도적 기반 마련)
- 행복주택, 재개발순환주택 및 창업지원 시설 설치 등 지역 균형발전 기여
 - 성남시는 가용토지가 부족한 상황이나, 환경기초시설의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부지를 이용한 공공개발 등 토지 이용효율 향상
- 기존부지 개발에 따른 일자리 창출(2,500명) 및 주거공급(3,000세대)
- 전국 11개 군사비행장과 군 접경지역의 군사시설에 관한 규제개혁 계기 마련

자료

중부일보

HOME 정치 국회·정당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성남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법' 국회 통과

김태년 | 승인 2020.03.08 17:31



김태년 국회의원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를 위한 군사기지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부지의 일부가 성남비행장 비행안전 제1구역과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4월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사기지법 개정안 통과로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사업은 계획대로 순항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민간재에서 접수·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뢰, 2021년 하반기 적격성검토 및 투자심의 완료, 2022년 상반기 공사 착공, 2026년 상반기 사업완료를 목표로 진행될 계획이다.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는 성남 하수처리장, 폐기물종합처리장,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센터를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에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하수처리장을 이전한 뒤에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에는 공공주택, 창업지원시설, 원도심 순환재개발에 필요한 이주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은 인근 주민들의 29년 숙원사업이다.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에 위치한 성남 하수처리장은 1992년 준공돼 29년째 운영 중이며, 악취발생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태년 의원은 "29년 주민숙원 사업이었던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를 위한 법이 통과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성남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sd1919@joongboo.com



23일 경기 성남시장에서 열린 '성남수질복원센터 부지의 공공개발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협약'에 참석한 변창흠 LH 사장(사진 왼쪽)과 은수미 성남시장(사진 오른쪽)이 협약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LH)

[아시아경제 이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가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위해 손을 잡았다.

LH는 23일 경기 성남시장에서 성남시와 '성남수질복원센터 부지의 공공개발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구 북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는 1992년 준공된 후 하루 46만 규모의 하수를 처리해왔다. 하지만 노후화에 따른 관망비율 증대와 악취 등 민원유발 문제를 겪어온 사실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 이전 및 종전부지 활용에 대한 양 기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업무분장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종전부지를 활용한 공공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성남시는 센터를 수정구 태평동 단원동 인근의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로 옮겨 처리와 동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LH는 약 27만㎡ 규모의 종전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위례신도시와 북정지구를 잇는 '성남일자리 창출 벨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LH는 총 3000가구 규모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80% 이상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LH는 '성남창업 특화마을'을 주제로 청년·사회초년 성 등의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지원주택과 지식산업센터 등 지원시설을 공급하고 성남시 도심 재개발 사업 지원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도 함께 마련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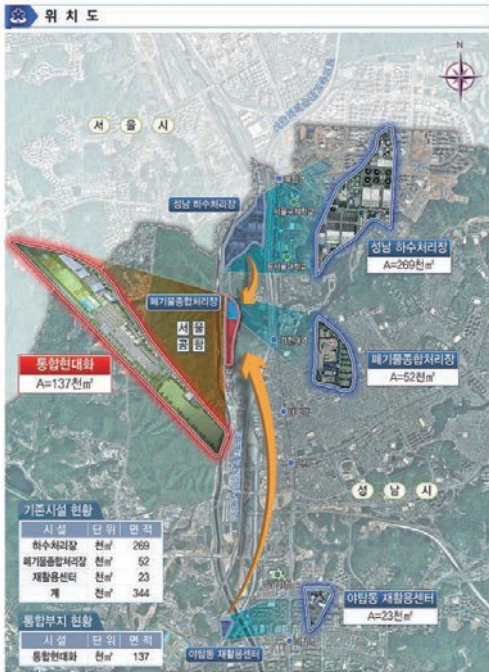
이번 사업은 성남수질복원센터 현대화사업 완료 후 2025년 지구 지정 절차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한편 해당 부지는 비행안전 제1구역으로 군사시설과 도포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었지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기초시설 등 비행에 지장이 없는 공공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군사기지법 개정을 지원하면서 이번 사업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LH측 설명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시설 이전부지의 공적개발을 통해 LH와 지자체가 상생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자체와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성남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통합 현대화 사업



조감도 및 개발구상(안)



〈추진부서〉 경기도 안산시 해양수산과(031-481-2337)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공유재에 대한 권리확보 〈소극적 관행을 탈피한 적극행정으로 전국 최초 공유수면에 점사용료 징수!〉

• 개선배경

- 한국전력공사, 「354kV 영흥도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당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의제협의)’ → 공유수면의 배타적, 독점적 권리 취득
과거 관행에 편승하여 반대급부적 성격인 송전선로 점용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음

※ 관련규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5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별표4] 〈도면#33〉

▶ 점용료 징수를 위한 법령 근거 마련 및 행정소송 수행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 상부공간 법령 및 개념 미흡으로 송전선로 허가시 부터 최근까지 길이(선,km)로 점용사용 징수됨. (점사용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 20년 이상 관행 개선 필요) - 허가당시 부과하지 못한 점용료를 법령에 근거한 소급징수 여부(신뢰보호원칙 검토) - 송전선로 면적 및 비용 산정에 대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전선로 점용료 대상 중앙부처 법령 질의 및 점용료 산정에 대한 훈령 개정 - 공유수면법의 명확한 해석 및 적극적 법률 검토 (관행타파), 즉시 행정처분 - 3년간 적극적 소송대응(신뢰보호 위반여부) -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징수는 정당한 행정처분 판결(2019.10.8.) - 판결에 따른 한전과 현장 합동점검 및 측량

- 과거 소극적 행태를 탈피하여 불확실한 법령의 명확한 해석과 적극적 행정 행위를 통한 공유재(공유수면) 이용의 공정성을 확보한 전국 최초의 사례 발굴

• 개선내용

- (국토관리적 측면) 공유수면법에 규정한 정당한 행정행위 전국 최초 실현
 - 공공재의 무분별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고갈되기 전 관리 실현
- (경제적 측면)
 - 2013년~2019년 공유수면 소급징수 점용료 250억원(향후 매년 약 40억원 부과 징수)
 - 21개 시군 적용가능 : 한국전력공사와 지자체 간 갈등 비용, 소송 비용 절감

• 보도자료

‘신뢰 보호의 원칙’의 희생양 市, 한전에 215억 소송 1심 ‘패소’

市, 2017년 개정 시행령 따라 철탑 설치 215억 정용료 징수
한전, “철탑 이외 공유수면 정용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며 소 제기
담당자 행정처리에는 문제 없어... 市, “항소 할 것” 2심 결과 주목

안산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제기한 대부도 공유수면 정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시는 지난해 한전으로부터 받은 정용료 215억5천22만8천720원에 대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정부(재판장 권대진)는 지난해 1월 10일 대법 1심 선고에서 안산시가 지난해 3월 한전에 부과한 정용료·사용료 215억5천522만8천720원에 대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시가 그간 한전에 대부도 공유수면에 설치, 사용해 온 송전철탑 41기의 철탑 부지에 대해 부과해 온 정용·사용료 이외에, 지난해 3월 한전 측이 제출한 도면에 의거해 총 47기의 철탑이 점유하고 있는 공중공간(선하지)에 대한 정용료를 추가로 부과해 납부 받은 비용을 한전 측에서 돌려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이다.

한전은 철탑 선하지의 정용료 부과에 대해 시의 부과 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이의했음, 송전철탑의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가 잘못 선정되었고, 공유수면 정용료가 당시 정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기에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시가 부과한 법률상 근거에는 문제가 없으며, 해당 업무 규정에는 해양수산부고시로 시행된 것으로 그 형식과 내용이 재량준칙에 불과하기에 토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유수면 정용료가 당시 정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기에 위법하다는 한전의 주장에는 한전 측의

‘명당한 신뢰에 반하여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보다 중대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해 안산시가 한전에 지게 할 신뢰보호의 원칙을 정당화한 행정처리에 의한 정용료 부과보다 우선적인 요소라고 판단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까지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하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과연 한전이 안산시에 대해 개인의 입장을 위한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위 사건을 주요 소송으로 지정하고 항소에 들어갈 것”이라며, “공직자의 정당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된 적법한 부과였기에 시는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관저사 >> 4면
이태호 기자 ka@ansannews.com

〈보도일자:2019.6.18.〉

안산시, 공유수면내 송전선로 점용료 받는다

〈전국 최초〉 〈시화호·대부도 일대〉

한전, 市 상대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부과 적법’ 판결
매년 40억여원 세외수입 ‘추가 확보’ 시민위한 사업 투입 예정

안산시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공유수면 내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를 받게 됐다. 시는 송전철탑 설치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세외수입 매년 40억여원 내역을 받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17일 안산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시를 상대로 낸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최근 받았다.

부과 대상은 한전이 안산시 관할 시화호 공유수면과 대부도 일원에 지난 2004년 설치한 철탑 47기의 송전선로에 대한 점·사용료다. 송전선로는 ‘345kV 영흥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시화호 수면 16km 길이에 걸쳐 설치돼 영흥와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경기 서남부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는 매년 주변 공사자금을 토대로 산정된 점용료를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다. 올해 30억원으로 추정되는 점용료는 매년 공사자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송전철탑에 대한 점용료는 징수돼 왔으나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왔다. 이에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근거로 송전선로 산하지(선상 아래 토지 및 수면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질의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2010년 1월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 매립법이 통합돼 제정된 ‘공유수면법’ 등에서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점용료 부과 근거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2018년 3월 한전에 점·사용료 219억원(2013년 3월~2018년 5월)을 부과하고 전액을 납부받았으나 한전이 두 달 뒤 송전선로 점·사용료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전으로 이어졌다.

시는 추가 확보된 세외수입을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시화호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사업 등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윤화섭 시장은 “시의 적극 행정으로 송전철탑설치에 따라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등으로 피해를 겪는 시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성/김태경 기자 kimd@kyeongin.com

〈보도일자: 2020.2.18.〉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시민모두가 공유재를 공평하게 활용할 권리확보



안산시 해양수산과
이 지 선
(031-481-2337)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원은 어떤 모습일지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복지부동, 탁상행정, 내 세금으로 월급 받은 사람’ 등 이젠 이런 비판적인
말은 옛말이 되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규제는 안전·환경·미래자원 보존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간혹
적극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불필요한 규칙을 개선해야 할 때가 있다.

산업의 발전으로 전기 수송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는 불가피한 시설물이지만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다. 과거 법령 미흡으로 공공재 공유수면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였으나 해양수산부 훈령 개정 요청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송전선로 점용료를 징수하게 되었다.

과거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는 전국에서 첫 사례로,
대형로펌을 상대하여 3년간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처분 전 법률자문이 부정적
임에도 소신 것 행정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심에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완전 패소하여 내외부의 질타에도 꺾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준비하여 최종 점용료
징수권을 확보했다.

새로운 세원을 연간 40억 원씩 징수하게 되어 시 재정에 반영하여 우리시민을
위해 사용하므로 모두가 공유재를 공평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다.
실패란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기 때문이지만, 성공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의
결과물인 것 같다.

〈추진부서〉 경기도 파주시 문화관광과(031-940-4362)

관광안내 ‘챗봇’이 도와드려요 〈기초지자체 최초 인공지능 여행안내 서비스 실시〉

• 개선배경

- 파주시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이며, 2019년 전국 지자체 관광 경쟁력 평가 시, 경기도 내 최우수 지자체로 관광안내 수요가 많음
- 평일 근무시간에만 관광안내가 가능하고, 관광안내 전문인력이 없어 정확한 안내서비스 제공에 한계, 관광안내로 인한 직원 업무 가중

▶ 상시 관광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 필요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근무시간에만 관광안내 가능 - 관광데이터 수집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5일/24시간 상시 관광안내 가능 - 관광객 질문 데이터 활용 관광정책 수립

- 파주시 관광과, 업무관련 ‘혁신동아리’ 구성 : 2020. 1. 6.

- 동아리명 : ‘자유로운 여행 파주’
- 주 제 : 관광활성화 및 연계 콘텐츠 개선방안 연구
- 구성/활동 : 관광과 직원 6명 / ‘20년 상반기 7회 모임, 약 24개 관광활성화 아이디어 발굴

⇒ 시간·장소 상관없이 관광안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관광안내 시스템 개발, 관광정보 접근성·편의성 개선 아이디어 도출

○ 추진일정

- 2020. 2. 사업추진 계획 수립
- 2020. 3.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완료(경기도)
- 2020. 4. 챗봇 개발 용역 계약
- 2020. 6. 챗봇 개발 완료
- 2020. 7. 챗봇 서비스 개시

- 주요내용 : 24시간 365일 가능한 상시 관광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
 - ① 선택형 관광 안내 : 주제별(관광/축제/음식 등) 105개 시나리오 구성
 - * 관광명소(테마별, 대중교통별, 코스별), 축제행사(대표축제, 공연전시, 이달의 행사), 음식·숙박·쇼핑, 관광관련 신청·예약·문의 등 선택형 버튼
 - 대량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관광·문화 관련 부서와 협업
 - ② 자연어 상담 : 관광지 고유명사 등 기본질문 120개, 관련질문 약 600개 답변 구성
 - 응답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AI 모니터링을 통한 업데이트

• 개선효과

- 서비스 개시이후 약 4개월(7.1.~11.11.) 동안 사용자수 1,128명(카카오채널 712, 홈페이지 416)
 - 자연어 질문 1,010건, 조회 1,675건 등
- 365일/24시간 상시 관광안내를 통한 관광객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관광 정보 검색 데이터 수집을 통해 관광정책 수립에 적용
 - 방문자 분석, 자주하는 질문, 시간대별 방문자 수, 매체별 방문자, 이용시간 등 분석을 통한 시기적절한 관광정보 제공
- 단순·반복적인 관광정보 문의에 대한 자동화로 업무 생산성·효율성 향상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언택트 행정서비스 제공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추진부서》 경기도 파주시 도시개발과(031-940-4711)

콘텐츠산업의 선두주자를 꿈꾸다 〈파주 통일동산 'CJ ENM 콘텐츠월드' 조성사업〉


• 개선배경

- 통일동산은 1990년대 국내 최대 안보관광지를 목표로 조성되었으나, 택지지구의 급속한 개발과 정책 변화로 다수의 미개발지 발생
- 개발수요 부족 및 신규 콘텐츠 부재로 매년 이용객 감소
- ▶ '파주 통일동산' 활성화를 위한 관광체험 복합문화단지 도입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1990년대 이후 장기 미개발지	- 아시아 최대 규모 CJ ENM 콘텐츠월드 유치

□ 파주 통일동산 'CJ ENM 콘텐츠월드' 조성사업

- 위 치 : 파주 통일동산 내
 - 면 적 : 21만7천㎡
 - 사업기간 : 2019 ~ 2021
 - 투자규모 : 3,200억원
 - 사업규모 : 축구장 32개규모
 - 14개 대단위 스튜디오
 - AR/VR 관광체험시설 등
- 
- [파주 통일동산 CJ ENM 콘텐츠 월드]
- 적극적인 규제완화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 국내최대 미디어기업 CJ ENM의 민간 투자사업 유치
 - LH 토지매각 과정에서 기관 간 갈등해결
 - LH와 시행자간 갈등을 행정력 기반의 중재안을 제시·협약하여 사업실현
 - 단순 방송스튜디오에서 콘텐츠월드로 개발계획 구상·수립
 - 지자체-사업시행자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최초 콘텐츠 기반 관광체험 복합문화단지 도입
 - 신속·정확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단기간 내 26일 심의까지 통과
 - 사전과업 일괄착수 및 역공정계획 수립으로 부실우려 해소

- 법률자문 등 발빠른 대처로 사업 안착
 - 토지매각에 대한 특혜시비에 대하여 법적 검토의견(자문) 제시(LH 이해설득)

• 개선효과

- 관광체험 복합문화단지 조성으로 침체된 '파주 통일동산' 활성화

→ 연간 120만명의 관광수요 창출. 향후 헤이리문화지구, 경기도 체인지업캠퍼스, 국가시설과 연계한 관광체험 복합문화단지 구축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 콘텐츠월드 조성·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2조2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콘텐츠관련 4차산업 청년일자리 21,700개 창출

CJ ENM 파주 콘텐츠월드 사업 본격화...내달 진입로 공사

송지현 | 2019-05-18 15:18



노승혁 기자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는 다음 달 말 말 CJ ENM이 진행한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
오후 CJ ENM 콘텐츠 월드 사업에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파주에 마천과 파주 금오 CJ ENM 콘텐츠 월드 조성 협약식
(2월 뉴스 지면지정)

CJ ENM 콘텐츠 월드 사업시행자인 CJ ENM은 최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진입도로에 대한 실시계

파주 CJ ENM 콘텐츠월드, 2년 앞당겨 내년 1단계 완공

송지현 | 2019-12-16 11:37



노승혁 기자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지구 특별계획구역에 조성되는 CJ
ENM 콘텐츠월드 조성사업 1단계 사업이 당초 예정보다 2년 이른 내년 말 완공될 전망이다.



파주 CJ ENM 콘텐츠월드 현장 방문 차 방문한 파주시청
관공서 계층·계단 및 안전 관리

최종판 사항은 16일 CJ ENM 콘텐츠월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한 파주시청 내용을 점검하고 공사 관
계지침을 전한 자리이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파주시는 올해 6월 CJ ENM과 사업협약 체결 후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에 한창이다.

파주 통일동산지구 특별계획구역 CJ ENM 콘텐츠 월드 조성 상생협약

파주시와 주식회사 씨제이엔엠(이하 CJ ENM)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파주 통일동산 CJ ENM 콘텐츠 월드」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파주시와 CJ ENM은 통일동산지구 특별계획구역 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콘텐츠 인프라를 조성하여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관광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협약내용) 파주시와 CJ ENM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중심 및 관광명소 조성을 목표로 글로벌 수준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문화관광 체험단지 조성을 위해 상생 협력한다.

제3조(역할분담) 파주시와 CJ ENM은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한다.

1. 파주시는 통일동산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본 사업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행정사무와 인원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2. CJ ENM은 수립된 개발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수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인근 문화지구와의 문화협력, 지역 콘텐츠 업체와의 상생 협력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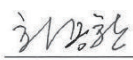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 파주시와 CJ ENM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과 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두기로 한다. 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협약의 효력 등) 본 협약은 각 협약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제6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2019년 6월 12일

PAJU
파주시장
최종환



CJ ENM
CJ ENM 대표
허민희

